

투데이 칼럼

정시의 본질

정시의 본질은, 모든 수험생에게 수험능력시험이라는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되 그 기회의 활용도에 따라 입시의 결과가 정해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기회의 활용도 자체가 서울과 지방, 중산층 이상과 이하(즉 부모의 재력과 정보력) 등에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차이는 극심하다. 온라인 강의가 아무리 보편화돼 있다 할지라도 고도화된 사교육 컨텐츠와 입시 전략의 설정이라는 정시 제도의 활용 방안이 지방 학생들은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실 수시는 이와 같은 정시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에 가깝다. 실제로 정시에서 높은 확률로 승리를 거두기 위한 확률은 선행학습으로 대표되는 고도로 효율화된 사교육 컨텐츠를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를 모든 정권에서는 '사교육 광풍'이라는 다섯 글자로 간단하게 정의했지만 이는 사실상 주어진 입시 제도를 바탕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복잡한 시장 메커니즘이 만들어 낸 결과물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당초 수능 성적 이외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시전형은 원래 종합적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으로 다양한 학생 코호트에 다양한 기회를 각각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 이전부터 존재했던 지역 균형 선발 등 일종의 특별전형들을 굳이 학생에 편입시킨 것 역시 이러한 설계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본격적으로 학생이 대입에 활용되면서 특정 코호트가 특정 제도에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 고교 또는 일반고에서 접근이 어려운 수시 일반전형은 사실상의 '금수저 전형'으로 비관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여러 차례의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전형의 진행 자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요소(이러테면 부모의 직업이나 학교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면접장에서 면접자에게 묻는 방식 등) 등은 학생의 본디 취지인 고

교별 교육 환경의 고려라는 본질을 해치고 있다. 즉 정시에서 발생하는 지역/소득 격차로 인한 기회 활용의 차별이 같은 유형으로 일어나는 뜻이다.

실제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입제도 개선 공론화 이후 서울대학교의 2022년도 입시요강에서 지역균형 선발 정원이 104명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전형의 경우 127명이 축소됐다. 그렇다면 이 축소된 231명이 모두 정시모집으로 전환될 경우 과연 이 231명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될 수 있을까? 어렵게 도이 또한 그렇지 않다. 기존 학생 일반전형을 노리던 학생들이 정시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으며, 강남 8학군에서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정시의 수시는 둘 다 모두 불공정하다. 시험이라는 것은 얼핏 보기에

공정해 보이지만, 시험의 가장 큰 단점은 시험 자체는 투명한 수단일 지라도 그 투명한 제도 내에서 승리를 높이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히 소득/지역 코호트별로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수시는 얼핏 보기에 금수저 전형에 불공정해 보이지만, 이는 현재의 학생 자체가 사실상 감각이 전형인 탓도 있으며, 앞서 언급했다시피 대학들이 학생 자체를 그리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

정시모집은 더 이상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교육을 아예 금지시키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시는 아직까지 공정성을 도모할 여유가 있는 제도이다. 물론 금일 대용량은 수시모집의 투명성 제고를 매우 강력하게 주문했다. 그러나 되도록 정시 확대에 대해서는 2018년 안을 바탕으로 한 교육부총리의 본디 방침을 유지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 여론'이라고 하지만, 그 여론 안에 실제로 입시의 이해관계가 절박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데 말이다.

여하튼 오늘 수능 시험일이다. 수험생들은 평소 공부한 것 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 모두 원하는 학과를 진학하기를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충돌 탈선 열차 살피는 사람들



12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북동쪽 109km기량 떨어진 브리만바리아 지역에서 두 열차가 충돌해 사람들이 탈선한 열차를 살펴보고 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고로 최소한 16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활과 화염병을 든 홍콩 시위 학생들



13일(현지시간) 홍콩의 중문대학에서 시위 학생들이 손수 만든 화염병과 활, 방패 등 시위 장비를 갖추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비협조

도민들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에 바라는 것이 있다. 지역발전엔 보탬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더불어 함께 가면서 잘 되는 상생정신 말이다. 그런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비협조 적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적은 어제 오늘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성적표가 나왔는데 너무나 저조하다. 지역 업체와 수의 계약한 건수가 연평균 17.4%에 불과한 것이다. 그같은 기록은 혁신도시의 지역상생 구현이 말뚝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도 겨우 19.5%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그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도 그 지역인재 채용률이 낮지만 전북 혁신도시만큼은 아니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의 인재 채용률은 부산이 32.1%이고 강원도가 29.1%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것까지 합산해 계산해보면 전국 평균은 23.4%이다. 전북보다 못한 지역은 제주도가 유일한데 그 채용률이 19.4%라서 이쪽과 오묘보백보 수준이다. 결국 전북혁신도시의 지역 채용률은 전국 최하위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지역 인재 채용률이 그처럼 낮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역 인재 채용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번에 언론사들이 우리 전북 지역에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설문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그때 도민들은 일자리 창출을 최고 우선순위로 꼽았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 채용에 소극적이나 많이 섭섭하다. 그동안 지역 인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여러 번 공표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다.

전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잘 알고 있을 터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일자리가 적다. 그래서 도민들은 답답해하는 정서가 팽배하다.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 채용에 협조적으로 나와야 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전북혁신도시 관계자들은 우리 지역 입장에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영세한 소규모 기업에 관심과 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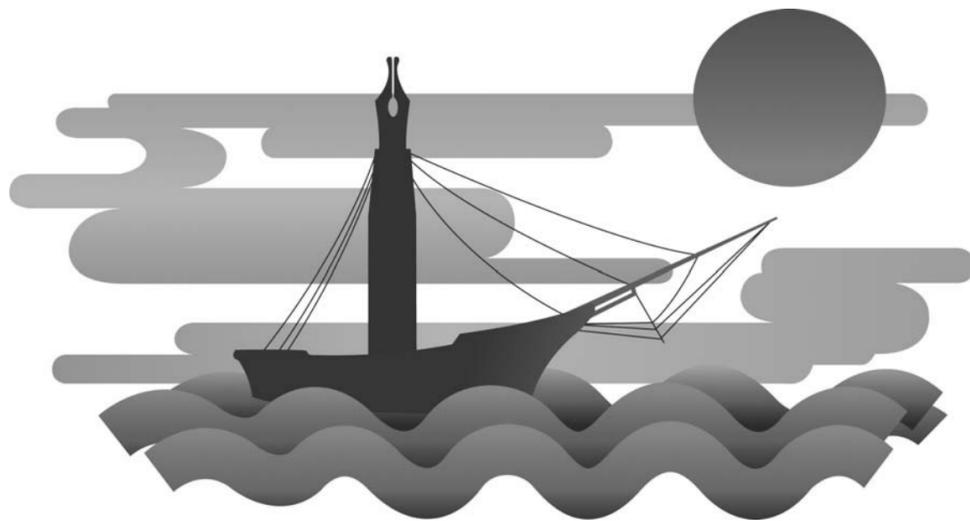
영세한 소규모 기업들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동안 힘들다는 호소가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도민들은 전북도가 앞으로 어떤 지원을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 기업이 잘 나가야 경제도 나아지고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이 어떤지 파악해야겠다. 지난 십수 년 간 전국 최하위라는 보고가 계속됐는데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없으니 말이다.

했던 말 또 하거나 군산 경제의 몰락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새삼스럽다 할 만큼 오래된 사건을 두고 다시 말 하는 것은 전북도가 중심을 잡고 일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급한 현안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당부는 저번에도 했던 바이다. 도내 기업들의 생존률 통계 보고를 보면 그동안 영세기업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가 있다.

전북도는 지역의 영세 기업들을

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중소기업들 쪽에서도 밝은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요즘이다. 그동안 영세기업들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 그럴 터이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흐름이 어려울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 늘 그랬거나 돈이 돌지 않는 지역 경제는 정체된 상태이다. 전북도가 군산 살리기를 최고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그쪽 하도급 업체 등 영세기업들의 형편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전북도는 지원으로 기업 생존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소영세기업들도 지역 경제를 받쳐주는데 그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들과 영세기업들이 그동안 애써 일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전처럼 인센티브를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군산쪽 기업들은 물론이고 도내 다른 지역의 소규모 영세기업들도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북도는 도내 영세 기업들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